제주 범죄 발생비 최고? "유동인구 고려해야"

제주연구원, 주민등록인구 10만명당 4343.7건 분석
체류인구 적용시 10만명당 3573.9건으로 18% 감소

제주지역 범죄 발생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특정지표만을 근거로 제주를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연구원 제주재난안전연구센터가 21일 내놓은 '제주지역 치안 수준에 대한 해석과 대응과제'라는 주제의 정책이슈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제주지역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비는 4343.7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다만 이를 단순히 지역 간 순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범죄 발생비는 범죄 발생건수를 주민등록인구로 표준화한 지표다. 지역 간 상대적인 범죄 발생수준을 비교하는 데 활용되나, 해당지역에서 실제 체류·활동하는 인구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는 상주인구에 비해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들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범죄 발생건수에는 포함되지만, 범죄 발생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민등록인구에는 포함되지 않은 구조적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다.

연구진은 또 제주처럼 외부 방문객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치안 수준을 주민등록인구 대비 범죄 발생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실제 범죄노출 수준과 치안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봤다.

2024년 관광객의 평균 체류기간을 고려한 일평균 체류인구를 반영한 결과, 제주의 범죄 발생비는 4343.7건에서 3573.9건으로 낮아져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상당 부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구진은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고려할 경우에도 제주의 범죄 발생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제주의 범죄 발생비는 2015년 5416.3건에서 2024년 4343.7건으로 19.8% 줄었으며 같은 기간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20.9% 감소했다. 반면 지능범죄 등 일부 범죄유형은 증가하고 있어 전체 범죄 발생비의 지역 간 순위보다는 범죄유형별 변화와 발생지역·시간대 등 실제 위험특성에 기반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지역의 범죄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안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지역 특성과 중장기적인 안전 개선 수준을 고려한 치안지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인 박창열 제주재난안전연구센터장은 "제주의 높은 범죄 발생비 자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되지만 특정 지표의 순위만으로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관광객과 활동인구 등 제주지역의 특성과 중장기적인 안전개선 수준을 함께 고려하고 실제 범죄위험에 기반해 치안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토평동 해양폐기물 처리시설 즉각 중단을"

비대위, 돈내코 등 파괴 우려… 입지 재검토 촉구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에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 주민 반발이 표면화 되고 있다. 주민 동의와 충분한 정보 공개,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이 없는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돈내코 지역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토평동 일대에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한)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입지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해당 지역 주변에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특히 돈내코는 제주의 대표적인 청정 계곡이자 보전해야 할 수자원·자연생태 자산"이라며 "이러한 지역에 해양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수질과 지하수·용천수 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돈내코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은 주민 의견수렴이 아닌 형식적인 행정절차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입지 선정 과정과 관련 자료를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정 수자원과 교육·복지·주거환경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전에는 공청회 자체가 개최돼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비대위는 "해양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공청회 개최를 즉각 중단·취소하고 토평동 후보지 선정 경위와 후보지 비교자료, 사업계획 등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돈내코 수계와 지하수·용천수를 비롯해 교육·복지·주거환경에 미치는 환경성·안전성·수질 영향을 객관적으로 재검증하라"며 "아울러 현재 부지를 전제로 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대체부지를 포함해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 외도동 사우나서 불
이용객 30여명 대피 소동

사우나 시설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8분쯤 제주시 외도2동에 있는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 2층 건식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우나 이용객 36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건식사우나 내부 3.3㎡가 불에 탔으나 불꽃은 없고 연기만 나는 상태였으며 화재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9시 41분쯤 완진됐다.

또 현장에서 임시진료소를 운영해 대피객들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대부분 양호해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방열기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액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독자 제보 750-2232

어선부두 점령한 해양쓰레기 21일 제주항 어선부두내 선착장에 어민들이 버린 해양쓰레기들이 쌓여있다. 강희만기자

트랙터 전복 70대 사망

서귀포시의 한 밭에서 트랙터가 뒤집히면서 70대 운전자가 숨졌다.

21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2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밭에서 70대 A씨가 몰던 트랙터가 뒤집혔다. 이 사고로 트랙터에 깔린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소방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소정기자

공무원 사칭해
노인 금품 강탈 30대 검거

공무원을 사칭해 노인의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31분쯤 서귀포시 보목동의 한 주택에서 80대 B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공무원인데, 어르신 건강상태를 점검하려고 왔다"며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추가범행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학대피해아동 치료 전문인력 제주 0명

민주당 서미화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 검토 결과
6월 기준 담당팀 인력 없어 피해아동 치료 공백

학대피해아동을 치료할 거점심리지원 인력이 올해 6월 기준 제주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거점심리지원팀의 현원은 37명으로 정원 51명보다 14명이 부족했다. 제주·충북·전북은 근무 인력이 한 명도 없었고, 제주는 2023년 1명이 배치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인력 공백이 이어졌다.

인력 공백은 치료 실적과 예산 집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는 2025년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국비 5491만 여원을 교부받고도 전액 집행하지 못했다.

2022년 사업이 시작된 거점심리지원팀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고난도·고위험 심리 문제를 가진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원인에 대해 "민간 대비 보수 수준이 열악해 신규 채용이 어렵고, 기존 종사자 중에서도 중도 퇴사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운영 지침으로 정하는 권고 연봉은 2024년부터 3년째 팀장 5500만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3700만원, 임상심리사 3100만원이다.

서미화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피해아동을 발굴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아동이 상처를 치료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전문인력이 없다면 반쪽짜리 아동보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부미현기자

국립종자원 인증'무병묘'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 장원농장

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써니트, 사라향, 설향, 유라, 레몬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7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 표 : 010-2691-1883